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 특례시 지정 공감대

시, 비빔공동체와 서명운동 전개… 700여명이 동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약 7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3일간 경기전 광장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한옥마을 여행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주시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지원과 직원들과 비빔공동체 회원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더 큰 전주! 전주 특례시로 한걸음 더!'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 홍보활동을 펼치고 홍보부스에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서명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 방법도 안내하고 지인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과 홍보부스를 본 주변 상인들도 직접 찾아와 서명했으며 시민들도 선뜻 서명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특례시에 대해 다소 생소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광역시 없는 전주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한옥마을비빔공동체는 지난 4일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에 참석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의지를 다졌으며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비빔공동체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힘들이 모아져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전주시가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8일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를 찾아 모포와 베개 등 이재민을 위한 필수품을 전달했다.

'강원 고성군민 여러분 힘내세요'

전주시, 산불 피해지역에 모포·베개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전주시가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8일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를 찾아 모포와 베개 등 이재민을 위한 필수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4일 변압기에서 발생한 불이 초속 20~3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큰 산불로 번져 주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이에, 시는 강원도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포와 베개 각 400개씩 총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긴급 안전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영문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갑작스런 산불로 긴급 대피해 불편을 겪고 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 총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 교수 의혹 '일부 사실로'

경찰, 2명 검찰 송치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관련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향을 미친 교수들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교수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시내 한 카페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B경감에게 '이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에 B경감은 다음날인 17일 전북대에 방문해 탐문활동을 하면서, 일부 교수들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통화를 했으면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조사결과 A교수는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총장에 대한 경찰의 '비리 내사설'로 불거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학 내부 게시판에 공개됐다.

'비리 내사설'은 총장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쟁점화 됐으며, 이 총장은 결국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일부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수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2명의 전·현직 교수에게서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수들에게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B경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비리 관련과 해당 교수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 송치 관련 브리핑이 8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조현제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전주시가 VR·AR(가상·증강현실)과 홀로그램과 같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섰다.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지역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는 VR·AR, 홀로그램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5세대(5G) 이동통신시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의 기획 단계 콘텐츠를 실감형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융복합기술기반 분야(9000만원)와 원천스토리기반 분야(8000만원)의 두 분야로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내일 'e 나라도움 교육' 실시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로 나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실에서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재단 문예진흥팀에서 e나라도움 회원가입, 교부신청, 정산관리 등 기본과정 위주로 진행한다.

본 교육에는 '2019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 그리고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예진흥팀(063-230-7431~7433)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일 때문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구속

동료와 말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인 A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모(48)씨를 폭행한 뒤,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잤으나 B씨는 다음날 새벽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을 깨우기 위해 숙소를 찾은 현장 소장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설현장 일 때문에 B씨에게 불만이 많아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완산수영장 11일부터 휴장

전주 완산수영장이 시설 개선공사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로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9일간 휴장한다.

8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제13회 전국학생장애인체전이, 같은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이 완산수영장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완산수영장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이를 통해 소년체전 등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훈련시설을 보완하고 자동 출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로비 천장과 벽, 바닥 등을 보수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게 수영장 측의 방침이다.

완산수영장은 공사와 체육대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 30일 오전 6시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

/송효철 기자

'정부 생활 SOC 3개년' 대응 나서

전주시, 사업 발굴 집중

전주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도서관, 안전·보건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오는 2022년까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돌봄, 안전 등 핵심 생활 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수립중인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에 대비해 정부방향에 부합하는 생활SOC 발굴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시설 복합화를 지원하고 유휴 국·공유지 활용 및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권장할 계획인 만큼, 시는 부서·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방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실외체육시설 등 공공 체육 인프라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공립노인요양시설, 교통·화재·재난안전시설, 휴양림, 야영장, 도시공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총망라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계획안이 확정되면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생활SOC 수요조사를 통해 총 25개 사업(총 2056억원 규모)을 발굴했으며 이번 3개년 계획안에 추가된 시설을 포함한 재수요조사를 거치면 사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부는 4월 중 생활SOC 재 수요조사 및 복합화 시설 추진 방식 추가 설명 등을 거쳐 이달 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는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익산 대학가 '원룸 전세사기' 피해액 27억여원

경찰 "임대 사업주 소유 원룸 더 있어 피해액 늘어날 수도"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수십억 규모의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익산경찰서는 임대가 만료된 원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임대사업주 A모(43)씨에게 연락했으나 이를 피하고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피해자 67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은 모두 15동이며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약 120여 명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유 건물 중 일부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며, 임차인들에게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 전기세 등을 받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더한 피해액이 현재까지 2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가 원룸을 추가로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 전세 사기 사건'의 논란이 커지자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 협회에서 임차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신용카드 훔쳐 60대 검거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절도혐의로 A모(61)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45분경 남원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친 뒤, 9만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